

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서영교 · 한정애  
박 정 · 이성윤 · 이기현  
한민수 · 임미애 · 김용민  
강유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.

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,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,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

고,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).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”  
을 “시·도, 시·군·구와 수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  
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수  
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  
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 
조사,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  
시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<u>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</u>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·도, 시·군·구와 수사기관</u>----- -----.</p> <p>1. ~ 2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,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